
『통일문제전문가·간부자문위원』
남북정상회담 성과관련 조사결과

2000.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www.acdpu.go.kr)

◀ 목 차 ▶

I. 조사개요 1

II. 조사결과(要旨)

1.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전망 관련 2
2. 향후 북한정세 및 주변국 對한반도정책관련 3
3. 정상회담이후의 정책과제 관련 4

III. 세부조사내용

1.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전망 관련 7
 ○ 정상회담 성과
 ○ 6·15 남북공동선언 5개항
 ○ 김정일 위원장 답방
 ○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전망

2. 향후 북한정세 및 주변국 對한반도정책관련 11
 ○ 북한의“ 대남 평화공존 노선으로의 선회”에 대한 견해
 ○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 전망
 ○ 정상회담이후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전망

3. 정상회담이후의 정책과제 관련 12
 ○ 정상회담이후 시급한 해결과제
 ○ 대북포용정책 추진방향
 ○ 통일시기 전망

□ 첨부 : 설문지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우리사회 여론주도층(민주평통 통일문제 전문가·간부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전망, 회담이후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자문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참여 : 총431명

- 자문위원 중 통일문제 전문가 : 대상자 100명중 69명(69%)
- 간부자문위원(운영·상임위원, 협의회장) : 대상자 522명중 362명(69.3%)

3. 조사기간 : 2000. 6. 19 ~ 6. 21

4.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조사

5. 조사내용 : 정상회담 관련 10문항

-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전망
- 향후 북한정세 및 주변국 대한반도정책
- 정상회담 이후의 정책과제 등

II. 조사결과(要旨)

1.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전망 관련

○ 회담의 성과

-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만족 : 99.1%)
 - * 매우만족 71.4%, 대체로 만족 27.7%, 불만족 0.9%
- 『6·15 남북공동선언』 5개항과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만족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평균 94.6%), 3,4,5항에 비해 1,2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① <제5항>‘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 개최’ (99.2%)
- ② <제4항>‘경제협력 등 제반 협력과 교류 활성화’(98.2%)
- ③ <제3항>‘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해결’(94.3%)
- ④ <제1항>‘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93.1%)
- ⑤ <제2항>‘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88.4%)

* 특히,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통일문제 전문가가 자문위원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제1항:78%<96.1%, 제2항:83.9%<89.4%).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서 98.4%가 지지하고 있음.

○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전망

-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전망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가 밝게 전망(93.7%).
 - * 잘 이행될 것 27.6%, 대체로 이행될 것 66.1%. 대체로 이행되지 못할 것 6.3%
- 통일문제 전문가가 자문위원보다 이행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음(88.4%<94.7%)

2. 향후 북한정세 및 주변국 對한반도정책 관련

○ 북한의 “대남 평화공존노선으로의 선회”에 대한 견해

- 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남 평화공존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견해에 89.5%가 공감하고 있으나, ‘매우공감’(25.4%) 보다는 ‘대체로 공감’(64.1%)이 많아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표명

* 특히, 통일문제전문가는 간부자문위원회에 비해 공감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76.5%<91.9%),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23.5%에 달함.

○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전망

- 전면적 개방과 부분적 개방을 포함 향후 북한이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절대 다수이며(96.3%), 전면개방(13%)보다는 「약간의 변화속에 부분개방」을 택할 것으로 예측(83.3%)하는 견해가 월등히 우세.

* 반면, 본질적으로 불변이며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는 3.5%에 불과.

- 정상회담전 조사결과(민주평통 간부자문위원회 305명, 5.19-5.26)와 비교시 북한 변화 가능성이 60.3%→96.3%로 증가

○ 정상회담이후 주변국의 對한반도 정책 변화전망

- 응답자의 62%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지원할 것이라는 견해도 28.9%에 달함.

- 특히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14.5%)에 비해 간부자문위원의 의견(31.7%)이 2배에 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관적 태도를 표명

3. 정상회담 이후의 정책과제 관련

○ 정상회담 이후 시급한 해결과제

- 「이산가족 상봉, 48.1%」,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39.6%」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보고 있음.

* 반면, 통일방안합의 2.6%, 국가보안법철폐 0.5%, 주한미군철수 0%에 불과

○ 대북 포용정책 추진방향

- 향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상호주의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56.8%).

-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문제 인식이 매우 신중하고 차분함을 보여 주고 있음.

*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적극 추진 34.8%, 북한체제유지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추진 4.6%, 현수준으로 추진 3.8%

○ 통일시기

-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48.7%가 5~10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통일문제전문가는 통일시기를 10~30년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음(61.2%).

<문항별 조사결과>

문항	주요답변	응답(%)
정상회담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한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만족(별로+매우)스럽지 못하다 	71.4 27.7 0.9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불만족(다소+매우) 	60.3 32.8 6.9
南의 연합제와 北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아 통일논의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불만족(다소+매우) 	33.1 55.3 11.6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비전향장기수문제 해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불만족(다소+매우) 	65.1 29.2 5.7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불만족(다소+매우) 	62.5 35.7 1.8
합의이행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의 개최(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불만족(다소+매우) 	78.7 20.5 0.8
김정일 위원장 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지지 ◦ 약간지지 ◦ 약간(절대)반대 	86.7 11.7 1.6
6·15 공동선언 이행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이행될 것이다 ◦ 대체로 이행될 것이다 ◦ 이행되지 못할 것이다(대체로+거의) 	27.6 66.1 6.3

문항	주요답변	응답(%)
북한의 '대남 평화공존 노선으로의 선회'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공감 ◦ 대체로 공감 ◦ 공감하지 않는다(대체로+전혀) 	<p>25.4</p> <p>64.1</p> <p>10.5</p>
북한의 향후 변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이변화, 전면개방 ◦ 약간변화, 부분개방 ◦ 본질불변, 변화기대 없음/모르겠다 	<p>13.0</p> <p>83.3</p> <p>3.7</p>
주변국 對한반도 정책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 ◦ 한반도의 '자주적'통일을 지원해 줄 것 ◦ 별변화 없을 것이다/모르겠다 	<p>62.0</p> <p>28.9</p> <p>9.1</p>
정상회담이후 시급한 해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 ◦ 평화체제 구축 ◦ 경제교류 협력 ◦ 통일방안 합의 ◦ 사회문화 교류 ◦ 북 핵, 미사일 해결 	<p>48.1</p> <p>39.6</p> <p>5.4</p> <p>2.6</p> <p>2.1</p> <p>1.7</p>
대북 포용정책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상호주의로 추진 ◦ 북한 변화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추진 ◦ 북한체제유지에 이용될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추진 ◦ 현 수준으로 추진 	<p>56.8</p> <p>34.8</p> <p>4.6</p> <p>3.8</p>
통일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년 이내 ◦ 10~30년 이내 ◦ 5년 이내 ◦ 30년 이상/불가능 	<p>48.7</p> <p>41.9</p> <p>5.1</p> <p>4.3</p>

III. 세부조사내용

1. 정상회담 성과 및 이행전망 관련

○ 회담 성과에 대한 견해(총평)

귀하는 분단이후 최초의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 \ 항목	①매우만족	②대체로 만족	만족 (①+②)	③별로 만족스럽지못함	④매우불만족스럽다	불만족 (③+④)
전체	71.4	27.7	(99.1)	0.7	0.2	(0.9)
간부자문위원	72.5	27.2	99.7	0.3	-	0.3
통일문제전문가	65.2	30.5	95.7	2.9	1.4	4.3

○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대상 \ 항목	①매우만족	②다소 만족	만족 (①+②)	③다소 불만족	④매우 불만족	불만족 (③+④)
전체	60.3	32.8	(93.1)	5.7	1.2	(6.9)
간부자문위원	63.3	32.8	96.1	3.3	0.6	3.9
통일문제전문가	45.6	32.4	78.0	17.6	4.4	22.0

○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南의 연합제안과 北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대상 \ 항목	①매우만족	②다소 만족	만족 (①+②)	③다소 불만족	④매우 불만족	불만족 (③+④)
전체	33.1	55.3	(88.4)	9.8	1.8	(11.6)
간부자문위원	32.3	57.1	89.4	8.8	1.8	10.6
통일문제전문가	36.8	47.1	83.9	14.7	1.4	16.1

○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대상 \ 항목	①매우만족	②다소 만족	만족 (①+②)	③다소 불만족	④매우 불만족	불만족 (③+④)
전체	65.1	29.2	(94.3)	5.0	0.7	(5.7)
간부자문위원	66.1	28.2	94.3	4.8	0.9	5.7
통일문제전문가	60.3	33.8	94.1	5.9	0.0	5.9

○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대상 \ 항목	①매우만족	②다소 만족	만족 (①+②)	③다소 불만족	④매우 불만족	불만족 (③+④)
전체	62.5	35.7	(98.2)	1.8	0.0	(1.8)
간부자문위원	61.4	36.7	98.1	1.9	0.0	1.9
통일문제전문가	67.6	30.9	98.5	1.5	0.0	1.5

○ 「6·15 남북공동선언」 제5항

합의이행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의 개최

대상 \ 항목	①매우만족	②다소 만족	만족 (①+②)	③다소 불만족	④매우 불만족	불만족 (③+④)
전체	78.7	20.5	(99.2)	0.5	0.3	(0.8)
간부자문위원	77.0	22.1	99.1	0.6	0.3	0.9
통일문제전문가	86.8	13.2	100	0.0	0.0	0

○ 김정일 위원장 답방

귀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상 \ 항목	①적극지지	②약간지지	지지 (①+②)	③약간반대	④절대반대	반대 (③+④)
전체	86.7	11.7	(98.4)	1.6	0.0	(1.6)
간부자문위원	86.6	12.0	98.6	1.4	0.0	1.4
통일문제전문가	87.0	10.1	97.1	2.9	0.0	2.9

○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전망

귀하는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대상 \ 항목	①잘 이행 될것이다	②대체로 이행될것이다	이행 (①+②)	③대체로 이행되지 못할것이다	④거의 이행되지 못할것이다	불이행 (③+④)
전체	27.6	66.1	(93.7)	6.3	0.0	(6.3)
간부자문위원	29.8	64.9	94.7	5.3	0.0	5.3
통일문제전문가	15.9	72.5	88.4	11.6	0.0	11.6

2. 향후 북한정세 및 주변국 對한반도정책 관련

○ 북한의 “대남 평화공존노선으로의 선회”에 대한 견해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대남 평화공존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상 \ 항목	①매우공감	②대체로 공감	동의 (①+②)	③대체로 공감하지않음	④전혀 공감하지않음	부동의 (③+④)
전체	25.4	64.1	(89.5)	9.3	1.2	(10.5)
간부자문위원	27.7	64.2	91.9	7.5	0.6	8.1
통일문제전문가	13.2	63.3	76.5	19.1	4.4	23.5

○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 전망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한의 향후 변화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 \ 항목	①많이변화, 전면개방	②약간변화, 부분개방	변화/개방 (①+②)	③본질불변, 변화기대 없음	④모르겠다
전체	13.0	83.3	(96.3)	3.5	0.2
간부자문위원	14.1	82.3	96.4	3.3	0.3
통일문제전문가	7.2	88.5	95.7	4.3	0.0

○ 정상회담이후 주변국의 對한반도정책 변화전망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보십니까?

대상 \ 항목	①영향력 확대	②한반도 '자주적' 통일지원	③별 변화 없을것	④모르겠다
전체	62.0	28.9	8.4	0.7
간부자문위원	60.3	31.7	7.4	0.6
통일문제전문가	71.1	14.5	13.0	1.4

3. 정상회담이후의 정책과제 관련

○ 정상회담이후 시급한 해결과제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가지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항목	①이산 가족상봉	②평화체 제구축	③통일방 안합의	④경제교 류협력	⑤사회문 화교류	⑥핵,미사일해결	⑦주한미 군철수	⑧국가보 안법철폐
전체	48.1	39.6	2.6	5.4	2.1	1.7	0.0	0.5
간부자문위원	48.5	40.6	2.8	4.8	1.3	1.7	0.0	0.3
통일문제전문가	46.4	34.8	1.4	8.7	5.8	1.5	0.0	1.4

○ 대북 포용정책 추진방향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우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상 \ 항목	①북한 변화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추진	②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상호주의로 추진	③현 수준으로 추진	④북한체제유지에 이용될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추진
전체	34.8	56.8	3.8	4.6
간부자문위원	33.7	58.3	2.6	5.4
통일문제전문가	40.3	49.3	10.4	0.0

○ 통일시기 전망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게 되셨습니까?

대상 \ 항목	①5년이내	②5~10년이내	③10~30년이내	④30년이상	⑤불가능하다
전체	5.1	48.7	41.9	3.9	0.4
간부자문위원	5.5	53.2	38.2	2.9	0.3
통일문제전문가	3.0	25.4	61.2	9.0	1.5

「통일문제전문가·간부자문위원」
정상회담 성과관련 설문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번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합의가 잘 이행되어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전망, 회담 이후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00년 6월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귀하는 분단이후 최초의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2.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가지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산가족 상봉
 ②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③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④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⑤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
 ⑥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해결
 ⑦ 주한미군 철수
 ⑧ 국가보안법 철폐

3. 다음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5개항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내용입니다. 해당의견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 의 내 용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南의 연합제와 北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아 통일논의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비전향장기수문제 해결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				
합의이행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의 개최				

4. 귀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지지한다.
 ② 약간 지지한다.
 ③ 약간 반대한다.

- ④ 절대 반대한다.
5. 귀하는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① 잘 이행될 것이다.
 ② 대체로 이행될 것이다.
 ③ 대체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다.
 ④ 거의 이행되지 못할 것이다.
6.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대남 평화공존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감한다.
 ② 대체로 공감한다.
 ③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7.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한의 향후 변화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변하고 있으며, 전면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② 약간 변하고 있으며, 부분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③ 본질적 변화는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④ 모르겠다.
8.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보십니까?
 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②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지원해 줄 것이다.
 ③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④ 모르겠다.
9.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게 되셨습니까?
 ① 5년 이내
 ② 5~10년 이내
 ③ 10~30년 이내
 ④ 30년 이상
 ⑤ 불가능하다.
10. 귀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우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②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상호주의로 추진
 ③ 현 수준으로 추진
 ④ 북한의 체제유지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추진 *****

2000 제1차 통일모니터링 결과보고

2.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민의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
제1차 통일모니터링 결과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민주평통 통일모니터 100명중 88명(88%)
- 조사기간 : 2000. 2.14 ~ 2.19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조사(Fax 송수신)
- 조사내용 : 대북포용정책관련

1.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도

- 본조사 결과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통일전문 93.2%가 지지

○ 「정경분리원칙」과 「상호주의원칙」에 대한 평가

- 정경분리원칙 (86.4%) 및 상호주의원칙(93.2%)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
- 정경분리 원칙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좀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대북 포용정책 주요 현안별 평가

-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동안 추진한 대북정책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금강산관광 등 경제교류협력(42%)과 서해사태에 대한 단호한 대처(42%)를 들고 있음.
-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관계 개선 기여한 것으로 평가(79.5%)
- 이산가족 상봉지원에 대해서는 93.1%가 지지

3 향후 대북 포용정책 전망과 과제

- 북-미, 북-일 관계 진전은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89.8%)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 향후 3년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81.8%)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대북정책 역점추진과제로는 △남북교류 활성화(40.9%)와 △한반도 냉전종식(19.3%)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13.6%)을 대표적 과제로 꼽고 있음.

4. 문항별 주요 설문조사 결과

설문내용	문항	응답(%)
1.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도	1)적극 지지한다	51.1
	2)다소 지지하는 편이다	42.1
	3)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5.7
	4)적극 반대한다	1.1
2. 정경분리원칙에 대한평가	1)매우 바람직하다	39.8
	2)대체로 바람직하다	46.6
	3)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10.2
	4)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3.4
3.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평가	1)매우 바람직하다	60.2
	2)대체로 바람직하다	33.0
	3)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5.7
	4)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1
4. 대북 정책중 가장 잘한정책	1)서해사태에 대한 단호한대처	42.0
	2)금강산관광 등 경제교류협력	42.0
	3)체육·문화교류	3.4
	4)비료지원 등 대북지원	5.7
	5)이산가족 재회 노력	2.3
	6)인적왕래	1.1
	7)북한이탈주민 지원	3.4
5. 금강산 관광사업의 남북관계 개선 기여도	1)크게 기여했다	34.1
	2)다소 기여했다	45.4
	3)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15.9
	4)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4.6

설문내용	문항	응답(%)
6. 인도적 목적의 대북식량 및 비료지원에 대한 견해	1)적극 추진	39.8
	2)신중하게 추진	29.5
	3)주고 받는 방식	30.7
	4)지원할 필요 없다	-
7. 이산가족 상봉 지원에 대한 견해	1)매우 바람직하다	54.5
	2)대체로 바람직하다	38.6
	3)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5.7
	4)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1
8. 북-미,북-일 관계가 남북관계 진전에 미칠 영향	1)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3.4
	2)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4
	3)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	9.1
	4)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	1.1
9.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향후 3년간 남북관계 전망	1)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	22.7
	2)약간의 진전이 있을 것임	59.1
	3)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임	17.1
	4)더욱 악화될 것임	1.1
10. 향후 대북정책 역점 추진과제	1)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	13.6
	2)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40.9
	3)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	2.3
	4)북한동포의 인권대책	5.7
	5)남북 정상회담 추진	5.7
	6)한반도 냉전 종식	19.3
	7)북한 이탈주민 지원대책	12.5

2000 제2차 통일모니터링 결과보고

4.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조 사 개 요

- 대 상 : 통일모니터요원 30명

- 설문내용 : 총 3문항 (개방형)
 - 남북정상회담 운영전략
 - 예상핵심의제에 대한 대응책
 - 남북정상회담 관련 민주평통의 역할

- 기 간 : 2000. 4. 12~4. 15

- 방 법 : FAX 이용 자체조사·분석

- 응 답 률 : 63% (19명)

남북정상회담 추진방향과 과제

1. 회담운용 기본방향

가.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

- 분단 55년만에 이루어진 정상간의 회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데 초점을 둠
- 상호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 유도가 중요

나. 남북정상회담 예비회담에 대한 준비 철저

- 최대 공약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면서 최소 공약수의 마지노선 설정
- 비정치분야에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평화선언 구상 등의 합의는 매우 중요)

다. 당사자 원칙의 강조

- 남북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 원칙의 효과와 의의를 설득
- 외부 개입 배제를 통한 '북한의 생존'과 독자성 확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가 필요함을 설득

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토대 마련

- 「기본합의서」 이행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경협·지원과 「합의서」 이행을 연계
 - 우선 비정치군사적 분야부터 이행되도록 노력
 - 최우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조기에 설치·운영

마. 상호합의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의제의 선정

- 향후 남북 당국자간 대화·교류의 지속 및 상호신뢰 구축에 초점
 - 일거에 많은 것을 이루려하기보다는 상호이익에 근거하여, 상호합의가 가능한 부분 중심으로 협상
-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가급적 피하고 인도주의 문제, 경협문제, 한반도 평화문제로 한정
 -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남북 불가침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선언’ 같은 상징적 선언을 통해서 해결하고,
 -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와 남북경협문제를 주의제로 다룰 필요
- 이번 정상회담은 분단후 첫회담이므로 쌍방간 타결이 쉽지 않은 통일문제는 제외
 - 탈북자 문제나 북한인권문제 등도 당분간은 보류

바. 상호신뢰확보의 강조 및 대북 포용정책의 진의 설명

- 북한에게 남한(정권)에 대한 신뢰감 제고
 - 아울러 남한(정권)이 대북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의 가시적 태도 변화 요구
-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 포용정책의 진의를 강조

사. 긴밀한 국제공조하에 추진

- 미국, 일본과의 기존 공조의 틀을 확고히 유지
 - 한미안보동맹을 저해하거나 한·미간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에서 배제

아. 가능한 상호방문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 김정일총비서의 한국방문을 이끌어낸다면 최대한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므로, 평양 방문 이후 어떠한 수준으로 회담을 정례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

2. 예상의제별 대응방향

가. 이산가족 문제

- 전면적인 상봉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생사확인과 시범적인 상봉사업은 이뤄지도록 경험과 상호 연계
 -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되, 이 문제를 제1순위로 다루기보다는 우리측의 대북지원에 따른 북한의 성의있는 보답 형태로 접근
 -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무조건 고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 유연한 상호주의 입장에 입각하여 단계적 해결방안 모색
-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는 판문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북한측이 거부할 경우 금강산 등 제3의 지역도 고려
 - 상봉시기는 8. 15 또는 추석이 바람직

※소수의견

- 동문제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큰 기대는 갖지않는 것이 바람직

나. 남북경협 문제

-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구분하여 접근

- 우리의 기업투자가 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점을 이해시키고, 대북경협은 민족공동번영과 상호이익 창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노동력·토지(북)와 자본·지식(남)이 혼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북한측이 희망하는 수준과 분야, 우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선별해 내는 작업을 선행
 - 시혜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대규모 경협의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의제를 개발, 북한에 제시
- 대북경협은 상호호혜의 가능성, 북한 투자환경 개선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 경협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가급적 현금·현물의 지원보다는 인적교류 확대방향으로 유도
- 재원조달과 국민적 합의창출의 어려움을 감안, 대북경협은 일단 국내조달가능한 범위에서 추진
 - 이러한 바탕위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시장가치가 상승하고 북한 스스로 외자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중장기적인 경제협력문제는 논의의 틀을 크게 가져나가면서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

- 북한전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은 우리의 재정능력이나 북한의 개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능
 - 남북간 철도연결, 화력발전 설비 지원, 나진-선봉 등 특구 지역과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공단에 SOC 건설 지원방안 등 제한적 지원 고려
- SOC에 대한 대북경제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BOT나 BTO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을 사용하여 투자자 측에서 일정기간 이를 관리하는 형태를 고수

※ 참고: 대북 SOC 건설지원시 사전 검토사항

①장기적으로 통일비용분산 등의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북한만 이득을 취하게 됨으로써 남북경협이 일방적 시혜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고, ②사회간접자본의 특성상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투자비 회수방안이 거의 없으며, ③각종 소요장비의 무상지원이 많고 무상지원에도 불구하고 댓가지불을 강요당할 수도 있어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멀어지도록 할 수 있고, ④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거나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특수계층에 의한 특수용도”로의 전용 가능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남북경협 정책이 적용되지 못할 것이며, ⑤북한은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유희설비의 대북이전을 거부하는 한편, 최신설비를 무상으로 이전받으려 하고 있고, ⑥북한이 원하는 기간에 첨단산업분야로 협력 확대시 획득한 첨단사업기술을 군사목적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⑦대북 교류협력대금, 대북지원 현금/물자의 군사분야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다.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 동문제는 남북한 대화만으로 풀 수 없는 사안이므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남북불가침선언’을 재확인하면서

- ‘한반도 평화선언’ 같은 상징적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

○ 남북기본합의서와는 별도로 「평화선언」 구상도 필요

- 동선언에는 기본합의서의 재가동, 남북한 중심 원칙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 중지 등을 포함

○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국제적 현안으로 남기고, 남북간에는 우선 북한군의 전진배치, 상호 재래식 무기 및 병력 감축 등에 초점

라. 대남공세 대응문제

○ 북한이 정상회담에 호응한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내세워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만약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대남정치공세 관련 문제를 의제화하려한다면 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본심을 의심해 볼 필요

○ 북한이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미전향장기수 문제 등 이른바 선행조건을 내세울 경우에는 「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기구들을 발족, 거기서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역제의

- 첫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의의에 치우쳐 자칫 증대한 양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내정불간섭 원칙’을 분명히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문제 등의 제기를

사전에 차단

- 북측의 자주, 평화, 민주, 민족대단결 등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

<주한미군>

- 북한은 이 문제를 다른 의제에서의 양보카드로 사용할 가능성
 - 만일 동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협상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동문제는 미국과 상의해야할 문제로 일축
 - 또는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정도에 따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및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한미간 협의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대응

<국가보안법>

- 동문제는 기본합의서상의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의제화 하기 어렵다는 입장 제시
 - 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사전 남북한 신뢰구축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됨을 강조
 - 동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화해공동위」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
- 북한의 노동당규약, 형법 개정과 연계

<북·미 평화협정>

- 평화협정은 민족내부문제로서 남북간의 직접대화·협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견지
 - 4자회담에서 논의 가능성을 상기

3. 추진시 유의점

가. 「상호주의」에 대한 명확한 원칙 정리

(*동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상당히 상이)

- 일방적으로 양보할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에 일방적으로 이 용당할 우려에 대비 ‘상호주의’ 원칙 견지
 - ‘상호주의’는 우리내부 보수주의자들의 공세를 막아 향후 남북대화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상호이익을 모색함에 있어서 절대적 상호주의 원칙은 지양 하고, 탄력적 상호주의로 접근

나. 초당적·범국민적 합의하에 추진

-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일거에 기존 현안을 해결하려는 태 도를 지양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 를 사전에 예방

- 북한 특수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 이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사전 정지 작업

- 우리 내부의 국민적 합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적 합의창출에 주역
 -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와 철저히 분리 추진하고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 ***